



2011년 8월 8일

정한울_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정원철_EAI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최우선 국정 우선순위】경제 우선 (양극화,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 뚜렷

- 국가안보/남북관계 아젠다는 후순위로 밀려

- “양극화 해소 · 성장 · 삶의 질 개선” 집중할 것, 특히 양극화 우려 2월 20.7% → 32.8%
- 2월 조사 대비 “국가안보 강화 · 남북관계 개선” 은 우선순위 급락 : 4위, 6위 → 10위, 7위로
- 최우선 국정아젠다,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 없어
- 체감경제 악화: 국가경제 체감도 호전세 반전. 가정경제 평가도 악화
- 이슈 소유권 : 양극화 완화 아젠다 한나라당의 우위 없어

【차기 대선 및 총선 관련】

- 박근혜 우위 속 손학규 정체, 문재인 부상

- “현정부 심판/정권교체론” 55.8% 공감, “범야권 통합” 53.9% 공감
- 정당고려 시 차기총선 한나라 34.3%, 민주당 27.0%, 미정 23.8%, 미정자 다수 정권교체 원해
- 차기대선 지지율 : 박근혜 34.6%, 손학규 8.2%, 김문수 5.7%, 문재인 5.6%, 오세훈 5.0% 순
- 한나라당 차기대선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1.0%, 오세훈 11.7%, 김문수 10.0%, 정몽준 6.3% 순
- 야권 단일부호 : 손학규 30.2%로, 유시민 10.9%, 문재인 7.6%, 한명숙 7.1%, 정동영 6.4%

【주요 정치지표】

- 평창효과 MB 지지율 40% 대 복귀, 중도층에서 한나라-민주격차 줄어

- MB 지지율 : 40%대 복귀 “평창 효과” : 35.9%(4월)→39.3%(6월)→43.1%(7월)
- 정당 지지율 : 한나라당 38.6% 대 민주당 28.8%
- 반값등록금/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민주당 지지격차 좁혀져



【최우선 국정 우선순위】문제는 경제 - 체감경제 악화

- “양극화 해소·성장·삶의 질 개선” 집중할 것, 특히 양극화 우려 2월 20.7% → 32.8%
 - 2월 조사 대비 “국가안보 강화·남북관계 개선”은 우선순위 급락 : 4위, 6위 → 10위, 7위로
-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1년 반을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들이 꼽은 최우선 국정아젠다를 살펴보면 양극화 완화 32.8%, 경제성장 15.6%, 삶의 질 개선 12.8%로 거시적, 개인적 차원에서 종합해보면 경제 아젠다를 꼽은 응답이 61.4%나 되었다. 특히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은 2010년 12월 조사에서 23.2%, 2012년 2월 조사에서 20.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2.8%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국가안보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와 같은 외교안보 아젠다들의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 국정 후순위 과제로 이해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연평도포격사건의 여파로 남북관계(14.8%) 및 국가안보 강화(11.1%)를 꼽은 응답이 각각 2위와 5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했고, 올 2월 조사만 하더라도 국가안보 강화를 꼽은 응답이 10.0%, 남북관계 개선을 꼽은 응답이 8.0%로 응답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각각 4위, 6위로 비교적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7월 조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4.5%로 7위, 국가안보강화는 3.5%로 보기 중 가장 낮은 응답을 받았다. 국민통합이 8.1%로 4위, 정치개혁이 7.7%로 5위, 교육개혁이 7.6%로 6위로 안보관련 아젠다의 빈자리를 채운 셈이다.

[표 1] 2010년 12월 이후 최우선 국정 아젠다(%)

순 위	최우선 아젠다	2010년 12월	순 위	최우선 아젠다	2011년 2월	순 위	최우선 아젠다	2011년 7월
1	경제양극화 완화	23.2	1	경제양극화	20.7	1	경제양극화	32.8
2	남북관계 개선	14.8	2	경제성장	19.0	2	경제성장	15.6
3	경제성장	12.0	3	삶의 질 개선	15.9	3	삶의 질 개선	12.8
4	국민통합	11.7	4	국가안보 강화	10.0	4	국민통합	8.1
5	국가안보 강화	11.1	5	국민통합	8.3	5	정치개혁	7.7
6	삶의 질 개선	8.9	6	남북관계 개선	8.0	6	교육개혁	7.6
7	정치개혁	7.4	7	교육개혁	6.3	7	남북관계 개선	4.5
8	교육개혁	5.3	8	정치개혁	5.1	8	국제경쟁력 강화	3.7
9	국제경제력 강화	3.8	9	국가경쟁력 강화	3.8	8	기타/모름/무응답	3.7
10	기타/모름/무응답	2.9	10	기타/모름/무응답	2.8	10	국가안보강화	3.5

자료: EAI · 한국리서치 2010년 12월,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1년 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 최우선 국정아젠다,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 없어

- 거시적,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 영역의 아젠다들이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힌 배경에는 그만큼 체감경기의 악화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취업시장의 좁은 문은 좀처럼 넓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여건 역시 우려스럽다는 소식들만 들린다. 미국의 경우 디폴트는 피했지만 신용등급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유럽발 경제위기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경제영역을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은 국민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핵심변수인 세대나 가구소득 그리고 정치성향의 핵심변수인 이념성향이나 지지정당에 의한 분석에서도 경제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중요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경제적 변수 중, 우선 세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적 양극화 완화,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을 3대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는 경우들이 많았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 완화는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경제성장은 20대와 30대에서만 삶의 질 개선보다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을 뿐 4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삶의 질 개선 역시 60대 이상을 제외하곤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7.5%와 19.7%를 그리고 3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10.1%와 9.9%의 응답비율을 보이며 3대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혔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도 모든 소득대별로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들 꼽고 있었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 역시 모든 소득대에서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다뤄야 한다는 주문들이 많았다.
- 정치성향에 따른 분석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답한 경우에서나 보수라고 답한 경우에서나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꼽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꼽은 비율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당지지에 따른 차이 역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지지자이든 민주당 지지자이든 최우선 국정아젠다의 순위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응답비율에서도 2%대 이내의 차이만 보였을 뿐이다. 정당지지에 따른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라면 군소정당, 즉 한라당과 민주당 이외의 정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국민들의 경우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비율이 42.9%로 전체평균 32.8%보다 높았으며 삶의 질 개선(12.6%)이 경제성장(9.7%)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는 정도뿐이다.
- 이 밖에 국정지지 여부에 따른 차이 역시 다른 변수들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나 모두에게서 경제적 양극화 완화,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차례로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고들 있었다. 물론 응답비율에서의 일부 차이는 나타난다. 우선 긍정평가자들의 경우 경제적 양극화를 꼽은 응답비율이 29.5%였다. 부정평가자들에서 나타난 응답비율은 36.2%였다. 경제성장은 각각 18.0%와 13.5%였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두고 있었으며 부정평가자들에게서는 긍정평가자들과 비교하여 경제적 양극화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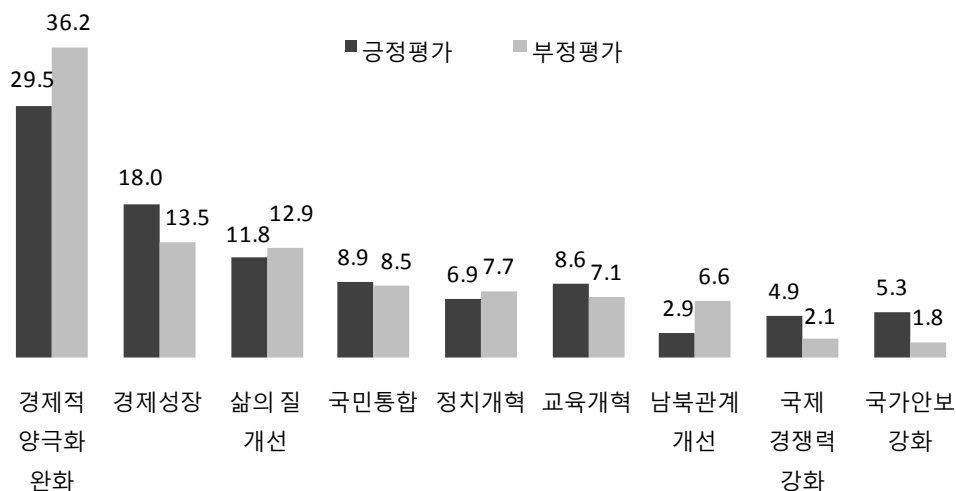
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였을 뿐이다.

[표 2] 사회경제 및 정치성향 변수별 최우선 국정아젠다(%)

전국 800명	경제적 양극화 완화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	국민통합	정치개혁	교육개혁	남북관계 개선	국제 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강화
	32.8	15.6	12.8	8.1	7.7	7.6	4.5	3.7	3.5
세대									
20대	26.6	15.1	17.5	6.2	8.1	10.8	3.7	6.9	2.2
30대	36.3	13.4	19.7	4.3	7.8	8.7	1.7	2.4	3.4
40대	38.0	18.0	10.1	9.9	8.0	5.5	3.7	2.3	2.2
50대	36.2	14.0	9.9	8.6	7.5	5.9	6.4	4.3	3.0
60대 이상	26.3	17.3	6.6	11.4	7.0	7.5	7.4	2.9	6.6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7.2	17.7	12.3	12.4	7.5	5.8	6.1	2.6	3.1
201~300만원	35.2	13.9	18.1	8.0	8.4	9.2	1.7	2.2	1.5
301~500만원	35.3	15.9	12.5	7.4	6.1	8.3	3.5	3.9	5.0
501만원 이상	36.1	16.2	9.2	4.4	8.1	7.5	6.8	5.0	2.8
이념성향									
진보	34.2	14.6	12.1	8.3	7.5	10.1	4.1	1.7	4.6
중도	33.9	17.3	12.9	6.3	7.8	6.8	4.6	4.4	2.1
보수	33.8	15.1	11.4	10.6	7.2	7.1	4.0	4.0	4.9
정당지지									
한나라당	31.0	17.8	11.5	8.5	7.7	7.8	2.6	4.5	5.1
민주당	30.4	17.1	14.2	9.2	6.0	9.9	9.5	1.8	0.7
군소정당	42.9	9.7	12.6	4.9	9.3	5.0	3.0	5.2	0.3
무당파	34.5	12.6	13.5	7.6	9.2	5.7	2.2	3.8	5.8

주: 모름/무응답 및 기타에 해당하는 사례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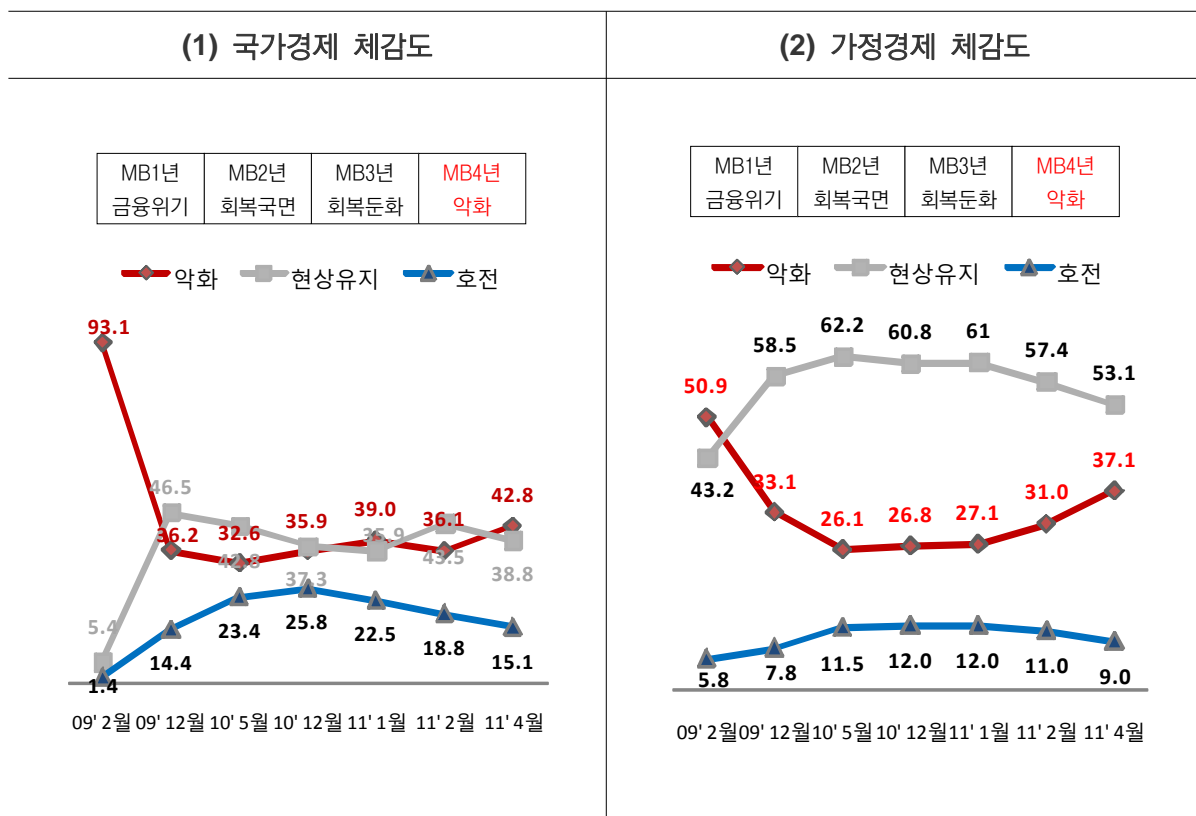
[그림 1]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에 따른 최우선 국정아젠다(%)



■ 체감경제 악화: 국가경제 체감도 호전세 반전. 가정경제 평가도 악화

- 이렇듯 경제적 양극화 완화 및 경제관련 아젠다들을 중시하는 여론이 강화된 것은 국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된 현상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또 있다. EAI 여론브리핑 제94호 (2011. 2.21)에서 2011년 2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이명박 정부 집권4년차 국정과제는 경제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지난 4월에 실시한 조사결과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 국가경제 체감도의 경우 호전되었다는 응답이 2011년 1월 22.5%에서 2월조사에서는 18.8%, 지난 4월 조사에서는 15.1%로 하락세가 완연하다. 같은 시기 국가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월 39.0%, 2월에는 36.1%로 다소 완화된 모습이었지만 4월 조사에서는 42.8%까지 상승했다.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호전되었다는 응답이 1월 12.0%, 2월 11.0%, 4월 9.0%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월 27.1%, 2월 31.0%였고 4월 조사에서 37.1%까지 오르는 등 나빠지고 있다는 인식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체감인식 변화: 2007년 4월~2011년 2월(%)



주: [그림3]은 EAI와 한국리서치가 국가경제상태와 개인경제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변화를 조사해온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호전, 현상유지, 악화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중 호전되었다는 응답과 악화되었다는 응답비율을 비교한 결과다.

■ 이슈 소유권 : 성장·정치개혁·외교는 한나라당, 남북관계 개선은 민주당 이슈소유권

– 민생관련 이슈(양극화 완화 / 삶의 개선 / 교육개혁) 무주공산

- 민주당은 교육개혁, 남북관계 개선 아젠다에서 한나라당보다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대부분의 이슈(경제성장, 정치개혁, 국제경쟁력, 국가안보 강화)에서 한나라당의 대안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국민들이 중시하는 양극화 완화, 삶의 질 개선, 교육개혁과 같이 민생과 관련 문제의 경우 여당과 야당 중 누가 더 잘할 지에 대한 의견이 앞서고 있다. 소위 이슈소유권 차원에서 보면 무주공산인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전 참여정부시기만 하더라도 정치개혁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양극화 완화의 경우 야당인 한나라당이 우세하던 이슈였는데 현 정부 들어와 민주당의 경우 정치개혁에서의 우세를 잃고, 한나라당의 경우 양극화 이슈에서의 우세를 상실했다.
- 양극화 완화 이슈의 경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으로 28.5%가 한나라당을 꼽았다. 반면 민주당을 꼽은 응답이 23.2%로 한나라당에 뒤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응답비율 8.0%까지를 합하면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높은 응답비율이 된다. 삶의 질 개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4.5%, 24.2%,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4.5%, 25.8%로 팽팽히 맞섰다. 이후 총선, 대선에서 이슈 캠페인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되는 대목이다.

[표 3] 이슈소유권: 각 국정 아젠다별 가장 잘 해결할 정당(%)

2011년 7월 조사

해결정당 아젠다	한나라당	민주당	군소 보수	군소 진보	기타/ 없음	아젠다 선택
경제적 양극화 완화	28.5	23.2	1.9	8.0	21.3	32.8
경제성장	40.3	21.0	0.8	1.6	22.6	15.6
삶의 질 개선	24.5	24.5	1.0	6.9	21.6	12.8
국민통합	30.8	24.6	3.1	3.1	27.7	8.1
정치개혁	29.0	16.1	1.6	1.6	35.5	7.7
교육개혁	24.2	25.8	3.2	4.8	25.8	7.6
남북관계 개선	16.7	52.8	0.0	5.6	13.9	4.5
국제 경쟁력 강화	48.3	20.7	3.4	0.0	17.2	3.7
국가안보 강화	63.0	3.7	0.0	0.0	22.2	3.5
전체	31.2	23.4	1.7	4.9	2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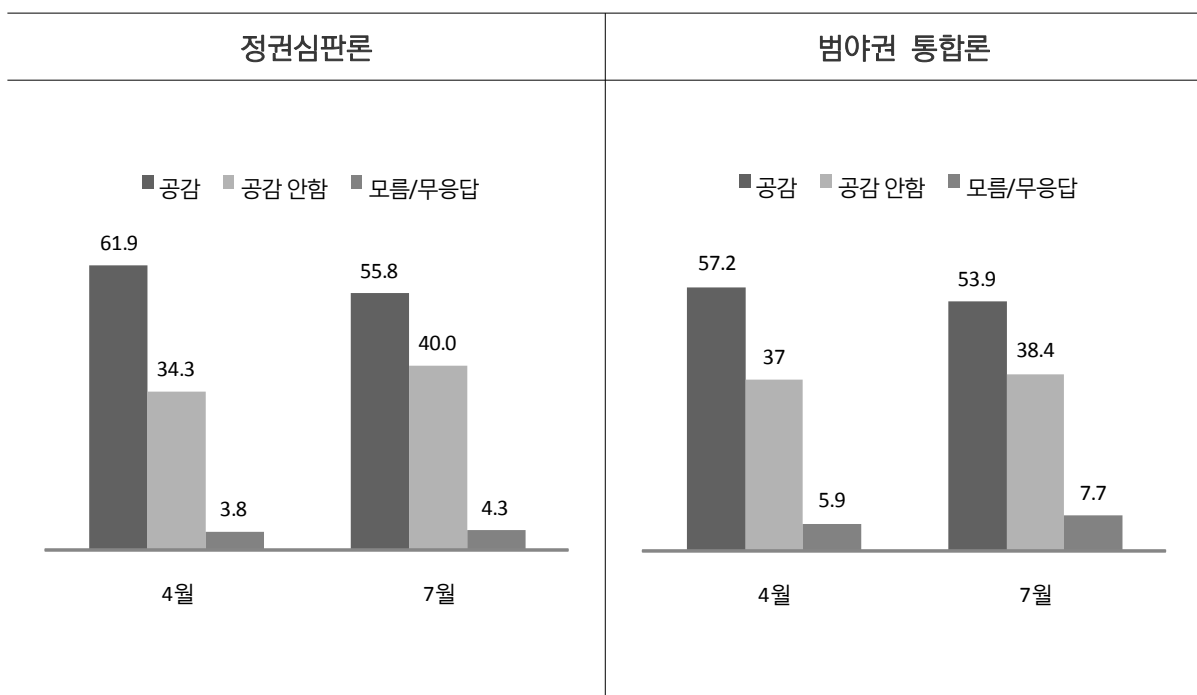
자료: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1년 7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차기 대선 및 총선 관련】

- “현정부 심판/정권교체론” 55.8% 공감, “범야권 통합” 53.9% 공감
- 정당고려 시 차기총선 한나라 34.3%, 민주당 27.0%, 미정 23.8%, 미정자 다수 정권교체 원해
- 최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는 홍준표 대표 등 새로운 인물들이 차기 당지도부로 등장하면서 현재의 정책과제 뿐 아니라 차기 총선, 대선관련 준비가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28 재보궐 선거 및 지난 7.4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차기 총선, 대선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국민들 사이에 현정부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심판론의 분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현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가 61.9%, 이번 조사에서는 55.8%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고 있다. 또한 야권의 통합노력에 대한 국민여론의 지지가 역시 4월 조사에서 57.2%로부터 7월 조사에서 53.9%로 하락되고는 있지만 역시 과반수인 53.9%가 범야권통합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림 3] 정권심판론 및 범야권통합론에 대한 공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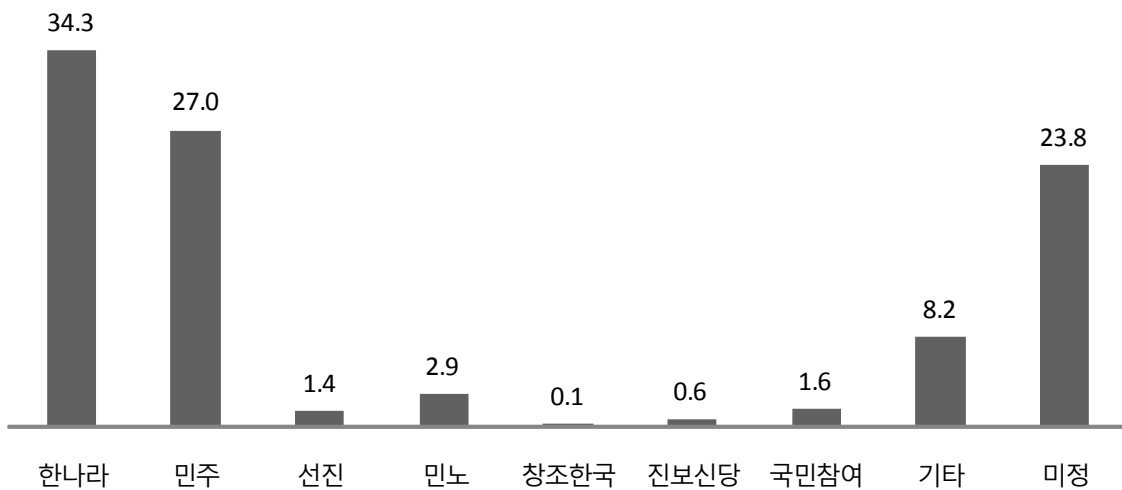


- 하지만 차기총선에서 정당만 고려할 경우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결과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의 경우 27.0%, 민주노동당 2.9% 국민참여당 1.6%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을 선택하거나 기권하겠다는 응답을 합하면 8.2% 수준이었다. 아직 정하지 못하고 그 때 가 봐야 안다는 응답이 23.8%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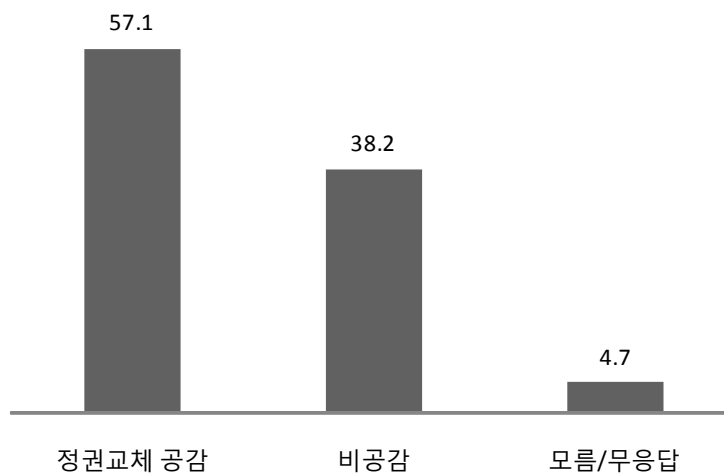
나타났다.

- 그러나 야권 정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한나라당 지지율과 대등한 상황일 뿐 아니라 앞서 본 정권심판론과 야권통합론에 대한 지지가 과반인 점을 고려하면 야권에게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야당 단독으로는 어느 정당도 현정부여당의 대안정당으로 확고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을 하지 않은 미결정층에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은 이들 미결정층에서의 투표선택은 야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총선의 경우 야권으로서 승산이 있는 승부가 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림 4] 정당만 고려할 경우 차기 총선 투표할 정당 후보(%)



[그림 5] 미결정정층에서의 차기대선 정권교체의 필요성 공감도(%)



▪ 차기대선 지지율 : 박근혜 34.6%, 손학규 8.2%, 김문수 5.7%, 문재인 5.6%, 오세훈 5.0% 순

- 7월 차기 대선주자 조사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4.6%로 독보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2%로 2위 자리를 지켰다. 손 대표는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12.0%로 두 자리 수 지지율에 진입했지만 5월 조사에서 한EU FTA 처리과정이나 만값등록금 논란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8.0%로 한자리수로 복귀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최근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혀 주목받은 김문수 지사가 5.7%로 3위, 손 대표의 정체 속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이 5.6%로 4위에 올랐다. 오세훈 시장은 5.0%에 그리고 유시민 참여당 대표가 4.6%로 6위에 그쳤다.

[표 4]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변화(%)

	2011년											
	순위	7월	순위	6월	순위	5월	순위	4월	순위	3월	순위	2월
박근혜	1	34.6	1	37.1	1	35.3	1	35.8	1	36.9	1	36
손학규	2	8.2	2	8.0	2	12.0	2	11.5	7	3.1	6	3.6
김문수	3	5.7	7	3.5	6	4.1	7	3.2	5	5.2	4	4.5
문재인	4	5.6	6	4.1	8	2.6						
오세훈	5	5.0	4	4.8	4	4.7	4	5.1	3	8.1	3	5.7
유시민	6	4.6	5	4.3	5	4.6	3	7.1	2	10.6	2	7.2
한명숙	7	3.5	3	5.7	3	5.1	6	3.6	4	6.4	5	4.4
이회창	8	3.1	9	2.7	8	2.6	7	3.2	6	3.8	8	2.9
정동영	9	3.0	10	2.1	7	3.0	9	1.7	9	2.6	9	2.2
정몽준	10	2.1	8	3	10	2.0	5	3.7	8	3.0	7	3.0
김두관	11	0.9	11	0.8	11	1.8	8	1.8	10	2.0	10	1.1
이재오	12	0.6	12	0.3	12	0.4	10	0.4	11	0.3	12	0.3
정세균	13	0.4	13	0	13	0.2	11	0.1	12	0.4	11	0.7
기타/없음	-	22.7	-	23.5		21.6	-	23	-	17.8	-	28.6

* 굵은 수치는 최근 6개월 간 가장 높은 지지율을 의미함.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추가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주목되는 문재인 이사장의 부상

-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 5월 조사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본 조사에서 차기 대선출마가 불투명한 친노성향의 한명숙 전총리(3.5%), 김두관 지사(0.9%)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대선출마 하지 않을 경우 한 전총리, 김두관 지사 지지층의 친노 적자로 인식되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지지율 보다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의 경우 당장은 선별무상급식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무상급식 찬반운동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 변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나라당 차기대선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1.0%, 오세훈 11.7%, 김문수 10.0%, 정몽준 6.3% 순
- 야권 단일후보 : 손학규 30.2%로, 유시민 10.9%, 문재인 7.6%, 한명숙 7.1%, 정동영 6.4%
- 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평가에서는 큰 변화 없이 박근혜 전 대표 51.0%, 오세훈 서울시장 11.7%, 김문수 경기지사 10.0%, 정몽준 전 대표 6.3%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박 전 대표의 독주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30.2%로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대표 10.9%, 문재인 이사장 7.6%, 한명숙 전 총리 7.1% 순, 정동영 최고위원 6.4%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이사장의 경우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어 야단 단일후보에서는 차기대선 지지율에서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5] 한나라당,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야권단일후보 대선후보	여권 대선 후보					
	박근혜	오세훈	김문수	정몽준	기타	없음 모름
1월	41.5	6.5	6.3	3.4	1.2	41.1
3월	55.0	12.1	9.9	6.2	3.1	13.8
4월	57.0	10.0	9.2	5.0	2.8	16.0
5월	53.5	9.0	10.5	4.7	1.8	17.0
6월	50.5	10.2	6.0	5.5	3.5	23.3
7월	51.0	11.7	10.0	6.3	3.7	17.3



야권단일후보 대선후보	야권단일후보							
	손학규	유시민	한명숙	정동영	정세균	문재인	기타	없음 모름
1월	15.9	12.9	8.6	6.0	2.5		4.0	50.0
3월	21.1	18.8	11.9	9.4	2.0		8.4	28.4
4월	41.4	10.4	8.4	6.5	1.2		6.0	26.1
5월	36.1	8.4	7.9	8.2	1.1	3.7	9.3	25.3
6월	29.3	9.1	10.6	5.8	1.0	5.8	6.0	32.4
7월	30.2	10.9	7.1	6.4	1.2	7.6	6.5	30.1

주: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조사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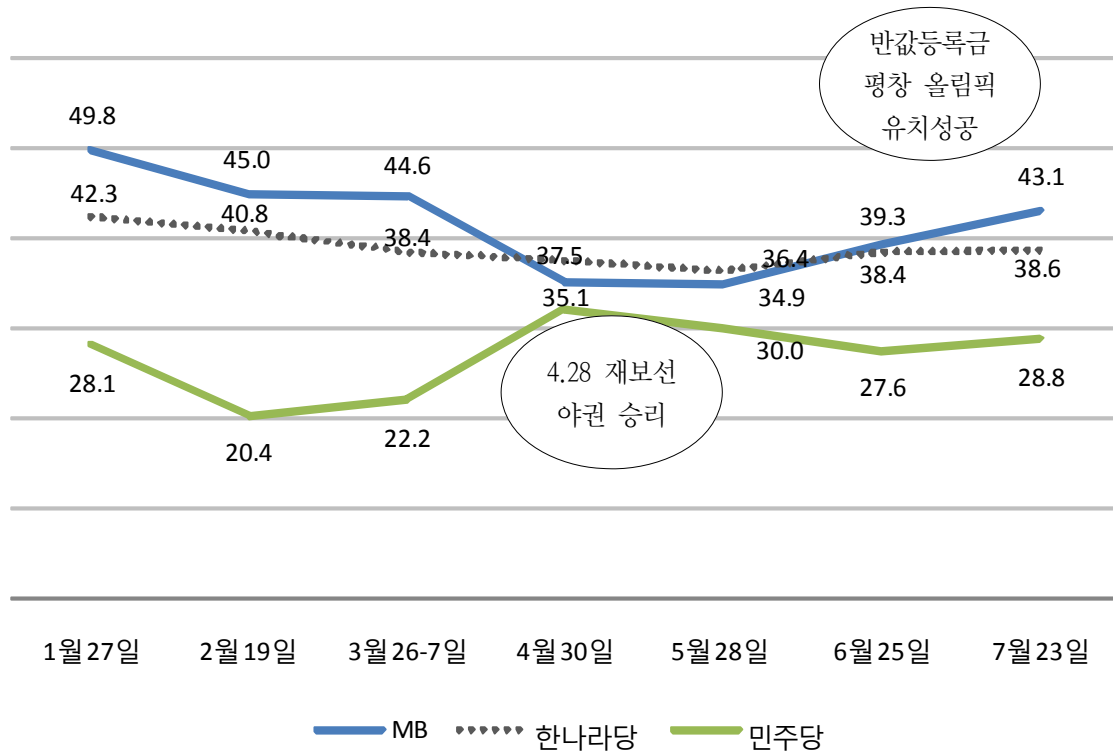
【주요 정치지표】

- MB 지지율 : 40%대 복귀 “평창 효과” : 35.9%(4월)→39.3%(6월)→43.1%(7월)
- 정당 지지율 : 한나라당 38.6% 대 민주당 28.8%
- 7월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43.1%로 전월 대비하여 3.8% 포인트 상승하며 40%대에 재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체감경제의 악화 및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나 검경 수사권 갈등 등으로 악재가 누적되어 왔지만 무엇보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이나 해외 순방 활동 등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우선순위가 경제 아젠다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체감경제 및 민생문제에서의 성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지지율 반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정당 지지율의 경우 한나라당은 38.6%, 민주당은 28.8%의 지지를 기록해 지난 6월에 비해 다소 지지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야권이 승리한 4.28 재보궐 선거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이후 특별한 추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 반값 등록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격차 좁혀져
- 다만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실시했던 조사 시점에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했던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격차가 좁혀졌다. 6월 반값등록금 촛불시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등 정부여당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8%로 6월 조사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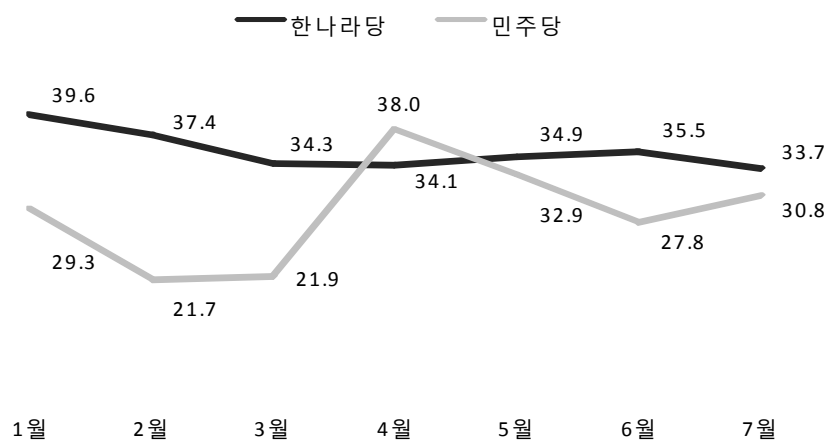


27.8%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33.7%로 나타남으로써 6월 조사에서의 35.5%와 비교하여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6] 대통령 지지율 및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변동(%)



[그림 7]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변화 (%)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수적이다. 매월 말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에 기반을 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7월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1년 7월 23일 (1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서울 500명)
표본추출	지역·성·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서울 성·연령 비례층화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pm 3.5\%$ (서울지역은 $\pm 4.4\%$)
조사방법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걸기방식)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획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중 www.eai.or.kr)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응답율	10.4% (서울 10.4%)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